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보도사항

담당부서

국제금융실

홍금표 매니저 (051-631-0295)

제8회 부산글로벌금융포럼 개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혁신 선도하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부산금융의 전략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리스크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금융, 핀테크가 주도하는 디지털 금융 등 미래 금융혁신에 부산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부산파이낸셜뉴스가 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개최한 제8회 부산글로벌금융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부산 역시 다양한 혁신과 포용금융으로 체질을 확 바꿔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포럼에는 국제금융센터 세계연합(WAIFC) 조첸 비더만 전무이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부산대 이장우 금융대학원장,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 한국해양대 윤희성 교수, 온더 디지털금융연구소 최공필 소장 등 국내외 금융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부산금융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미래를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부산 금융의 생존 전략으로 ESG를 첫손에 꼽았다.

ESG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에서 부산 금융권도 ESG경영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은 "탄소 배출 등으로 지구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과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만족도를 고려하지 않은 기업은 살아남기 힘들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기존에 재무적 성과로 평가받았던 금융사도 이제 ESG 경영을 해야 지속가능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금융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온더 디지털금융연구소 최공필 소장은 "미래 금융이 디지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금융서비스 전달 방식이 예대마진 중심인 은행에서 지불 플랫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개막사·축사



박형준
부산시장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



윤봉학
부산fn 사장

제8회 부산글로벌금융포럼에 참석한 주요 내외빈은 코로나 이후 산업과 경제환경 모두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부산글로벌금융포럼 축사를 통해 "금융중심지 부산은 오늘 포럼 주제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혁신을 선도하라'는 내용 그대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금융환경에서 글로벌 금융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수 있도록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핀테크,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첨단금융산업 육성에 집중하면서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부산을 해양금융특구로 지정해 해양금융을 활성화시키는 전략도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부산은 최근 전 세계 금융도시 12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 국제금융센터지수' 하반기 평가에서 작년 상반기보다 18단계나 상승한 33위에 랭크되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박 시장은 "무엇보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는 핀테크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환경 발전에 직접적인 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융중심지 부산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금융과 함께 녹색금융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부원장은 이날 영상으로 전한 축사에서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금융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부산이 강점을 가진 조선·해운 산업에서도 친환경 기술 고도화 및 저탄소 에너지 개발 등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부산은 올해 처음으로 국제녹색금융지수가 78개국 중 31위로 순위권에 진입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지속한다면 녹색금융의 경쟁력을 높여 녹색경제로의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윤봉학 부산파이낸셜뉴스 사장은 이날 개막사에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베인앤컴퍼니가 발표한 '경영자가 해야 할 3가지 코로나 위기 대처방안'을 언급하며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단 마련(지키기)과 피해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회복하기), 다시 성장하기 위해 미래를 대비한 대대적 개편(재편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사장은 "이번 포럼의 주제와도 궤를 같이하는 이 같은 위기극복 대처방안을 적극 연구하고 도입함으로써 금융중심지 부산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초연설

조첸 비더만 국제금융센터세계연합 전무이사



"금융 미래에 영향을 미칠 금융산업 트렌드 중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조첸 비더만 국제금융센터세계연합(WAIFC) 전무이사는 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부산글로벌금융포럼 기초연설에서 '금융의 미래:코로나19, 디지털 전환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금융센터의 대응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미래 금융산업 트렌드로 △빅데이터&인공지능 △지역 개발 △경제 변화 △지속 가능성 △디지털 전환 등 5가지를 꼽았다. 이 중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전환 2개 부문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은 '핀테크 혁명'이 주도하고 있다. 이미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프로세스 자동화가 금융 분야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중앙은행에서 법정통화로 발행하는 디지털 원, 디파이(Decentralized Finance)와 같은 디지털 통화가 그것이다.

비더만 전무이사는 "디파이로 인해 은행은 금융 서비스 핵심의 중개자 역할을 뺏길 수 있다"며 "스마트 계약과 탈중앙화 자율 조직(DAO)으로 대출과 같은 핵심 은행 서비스가 전면 자동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디파이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거의 1000억달러가 디파이에 저장돼 있다. 이는 전년 동기 100억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스마트 계약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 같은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며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몇 가지 특징을 공유하지만 속도가 더 빠르다. 솔라나의 경우 초당 5만건의 거래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이는 일상적인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빠른 수치다.

디지털화된 오픈 बैं킹은 소비자의 금융 데이터와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다. 이로써 금융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의 지속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지속가능한 금융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속가능한 금융, 포괄적 금융을 들 수 있다.

비더만 전무이사는 "ESG 보고와 분류법은 팬데믹 이전에도 중요했지만 완전한 경제 회복을 바라는 현 시점에서 더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SG 점수는 작은 기업일수록 큰 기업체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작은 기업들의 전환 단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금융의 또 다른 주제는 '기후 금융'이다. 전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전 세계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새로운 대규모 녹색 채권 발행들을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 포괄적 금융은 한국이 기술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이며 금융분야도 고도로 발달돼 있다. G20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인의 95%가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92% 이상이 4년 전인 2017년에 이미 디지털 결제를 사용한 바 있다.

비더만 전무이사는 "포괄적 금융을 위해서는 기업 디지털 ID처럼 국경을 초월한 스마트 솔루션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 솔루션을 개발한 곳이 한국의 핀테크 기업이므로 한국이 금융업계 전반에 걸쳐 글로벌 기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활발한 역할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부산은 공항과 항만, 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를 구축해 세계 물류 중심지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신공항과 신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공공 및 민간 자금을 유치해야 한다. 세계 연합은 부산금융진흥원이 부산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

조했다.

-패널토론



동북아 금융허브의 재도약을 위해 부산이 갖춰야 할 모멘텀(성장동력)은 무엇일까.

8회째 맞은 부산글로벌금융포럼에서는 부산을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디지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한편 과감한 규제개혁과 세제혜택과 같은 인센티브가 더 많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돈이 되는 정보가 부산에 모여야

성낙주 한국해양진흥공사 본부장은 부산의 해양금융 발전의 걸림돌로 결제 수단 달러의 조달로 꼽았다. 성 본부장은 "부산이 해양금융중심지로 발전하려면 소위 돈이 되는 정보가 부산 내에서 일어나야 한다. 대표적으로 투자 기업을 유치하고 금융기관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가 모이려면 정책적인 수단도 동원돼야 하고 민간에서도 함께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박금융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이다. 특히 선박금융은 달러가 국제적인 결제수단으로 쓴다. 원화결제와는 달리 회계와 세제 간 차이가 크다. 국제적으로 해운사와 조선소, 화주 간 거래를 달러로 하는 국제통화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희성 해양대 교수는 "부산과 울산, 경남은 세계 최고의 조선산업 중

심지지만 개인이 선박을 소유하는 비율은 낮다. 선박 시장이 크면 불황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매우 커진다. 다만 선박 투자를 위해 투자금을 모은다면 그것이 펀드인지 증권인지 제도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감한 규제 혁신과 자율성 주어져야

무엇보다 부산이 디지털금융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규제자유특구의 본래 취지에 맞춰 과감한 규제 혁신과 기업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부산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넘어서 디지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야 한다. 도시 전체가 디지털화된 미래금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모습을 부산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에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을 강조한 최공필 온더 디지털금융연구소 소장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디지털 자산 금융은 미래 관점에서 시장이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자율성을 줘야 한다"라며 "기업과 공공이 신뢰를 토대로 서로의 역할을 지켜줘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이장우 부산대 금융대학원 원장 "국가부채 줄이려면 시장친화정책 펼쳐야"

우리나라의 과도한 국가부채 증가가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빨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시장친화적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6일 부산글로벌금융포럼에서 이장우 부산대 금융대학원 원장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1000조를 돌파했다. 부채 증가율도 28개 OECD 국가 중에서 칠레에 이어 두 번째(25.8%)로 높다. 성장속도(GDP)보다 국가부채 증가율이 낮으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처럼 성장이 둔화되는 시점에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려면 빨리 부채를 줄이고 반기업 정책을 배제하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이 내다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한 암울한 전망이 컸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는 글로벌 교역 둔화, 조업 중단이 먼저 일어났고 이로 인해 각국이 얽혀있는 생산사슬이 붕괴됐다. 아울러 투자·생산·소비·수출의 감소로 이어져 연쇄적인 경제성장 둔화 현상을 일으켰다.

이 원장은 "이 같은 거시경제의 성장 둔화로 인해 일자리와 소득, 소비, 투자가 감소하는 악순환을 일으켰고, 이것이 결국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 불평등과 차별 나아가 범죄율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네거티브 임팩트(Negative impact)는 경제구조가 탄탄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나 저소득 국가에서 더 크게 일어난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경제 회복의 둔화와 부의 재분배가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정부에선 고통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그 대안은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닌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 윤희성 한국해양대 교수 "경기 취약한 조선·해운, 금융 뒷받침 필요"

이날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윤희성 한국해양대 교수는 "조선·해운산업은 부산은 물론 국가의 중요한 기간 산업이지만 경기 변동에 취약한 특징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교수는 현재 해양선박금융에서 정책금융이 한계에 달한 만큼 민간금융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해운업 장기침체로 민간 상업금융기관의 여신이 축소되고 선박금융 수요를 정책금융기관이 담당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책금융 지원은 해운산업 회복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고 앞으로도 정책금융의 중요성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변화하는 해양환경 규제 아래에 늘어나는 선박금융의 수요를 이제 정책금융만으로 모두 충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정책금융의 한계로 정책의 지속성 유지, 의사결정 구조, 구축(驅逐) 효과 등을 꼽았다.

그는 "정책금융은 산업 간 지원혜택의 형평성 문제로 정책을 유지하기 힘들고 의사결정도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책금융이 활성화될수록 민간금융은 위축되는 반작용이 발생한다"면서 "반면 민간금융은 의사결정이 빠르고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금융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는 △해운조선과 금융을 융합한 인재육성 △해운산업의 시장위험 축소 △해운·조선·금융·연구개발 클러스터화를 통한 공영 생태계 조성 △해운업 자금 지원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그는 "민간금융 활성화가 해운업 살리기로 이어져 해운과 금융이 상생하는 공영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ESG 연계 파생상품 활성화 속도내야"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인 가운데 파생상품시장도 ESG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부산글로벌금융포럼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은 "미래 금융산업은 전통적 기능에다 ESG 경영 촉진, 혁신 성장 마중물, 노후소득 증대라는 3가지 기능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유럽 배출권 시장의 실태를 소개하며, 글로벌 ESG ETF(상장지수펀드)의 성장세가 가파르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글로벌 탄소거래시장 거래 규모는 약 2700억달러로 이중 유럽 시장이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시장은 0.4%에 불과하다"면서 "다행히 제3기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한국 배출권거래 시장도 꾸준히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말 기준 글로벌 ESG ETF의 순자산 총액은 2690억 달러로 2015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고, ESG ETF는 동일 벤치마크 ETF에 비해 위험조정 성과도 우수하다"면서 "한국도 ESG ETF에 대한 공략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ESG 경영 촉진을 위해 파생상품시장이 기업 고유위험 관리, ESG 시장위험 관리, ESG 혁신 지원 등을 통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고유위험 관리를 위해선 개별주식 옵션, 개별주식 워런트, 섹터 선물옵션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ESG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는 배출권 선물, 친환경 전력 선물, 날씨선물 등 ESG 관련 파생상품 활성화를 꼽았다. ESG 혁신 지원을 위해선 ESG 특화 액티브 ETF 및 관련 파생상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최공필 온더 디지털금융연구소 소장 "플랫폼 경제 확산... 금융산업도 예외 아냐"

"미래 금융은 '디지털 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최공필 온더 디지털금융연구소장은 6일 부산글로벌금융포럼에서 미래 금융인 '디지털 금융'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현재 디지털 금융 전환이 어렵다는 현실을 토로했다.

최 소장은 "기존 은행이 디지털 금융으로 변화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이슈"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금융으로 가기 위해서는 금융서비스 전달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 현재 예대마진 중심인 은행에서 지불 플랫폼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플랫폼 경제에서 성공하려면 대중들이 눈치보지 않고 나설 수 있는 개방 경쟁환경이 핵심"이라며 "특히 초기 정착과정에서 문제점과 위험이 부각되고 이를 관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디지털 금융의 모습이 다듬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 소장은 가상자산이 현 금융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의 가치 창출과 보존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의 활용이 가능한 규제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은 모든 디지털 자산시장에 걸쳐 자본과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됐다. 이 코인은 가상자산 변동성의 약점을 보완하며 동시에 정부가 독점했던 화폐 주도권을 민간에게 여는 것을 가속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최 소장은 "문제는 현행 법 규제 체계에서 가상자산을 뒷받침할 만한 신뢰 토대의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신뢰확보를 위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나 보안 문제에 대한 원칙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권병석 팀장 정명진 노동균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입력 2021.10.06 18:11수정 2021.10.06 20:52